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93
----------	-------

발의연월일 : 2021. 6. 18.

발 의 자 : 정청래 · 강득구 · 강민정
고영인 · 서동용 · 송갑석
양이원영 · 오영환 · 윤재갑
이규민 · 임오경 · 임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사고는 지형지물, 구조 등 건물별 특성을 고려해 해체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체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해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를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진행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u>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u>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진행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②·③ (현행과 같음)